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9월 29일(월)
통권1호(제1권 제9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신의주공업지구 산업 입지와 지역 개요



신의주시 일부

신의주공업지구는 평안북도 도청 소재지인 신의주를 중심으로 용암포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학섬유, 제지, 방직, 기계, 조선 등이 주로 입지하고 있다.

신의주는 압록강 하류의 동안에 위치하며 압록강철교를 사이에 두고 중국의 단둥과 마주하고 있다. 1924년 평안북도 도청이 의주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명실상부한 평북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시 외곽에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35개동과 13개의 리로 편성되어 있다. 2002년 9월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된 바 있다. 시의 면적은 166km²로 도 전체의 1.3%이며, 인구는 약 36만 명으로 도 전체의 13%에 이르러 도 면적대비 인구비율이 높은 편이다.

신의주의 압록강 유역에는 점토, 모래, 자갈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퇴적지형으로 해발고도 5m내외의 저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남쪽 배후에 구릉지를 가지고 있다. 큰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영향을 받아 연 평균기온이 8.8℃로 평안북도 어느 지방보다 높고 연 강수량은 1,066mm이며, 신의주의 동부외곽 석하리와 중재리를 중심으로 소나무와 신갈나무 등이 비교적 풍부한 식생을 보이고 있다. 신의주 토지면적의 57%가 농지로 경작지는 논 45%, 밭 44%, 과수원 10%의 비율로 논농사는 범람원 지역에서 밭농사와 과수원은 주로 구릉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편 신의주는 화학, 건재공업의 원료인 회탕



북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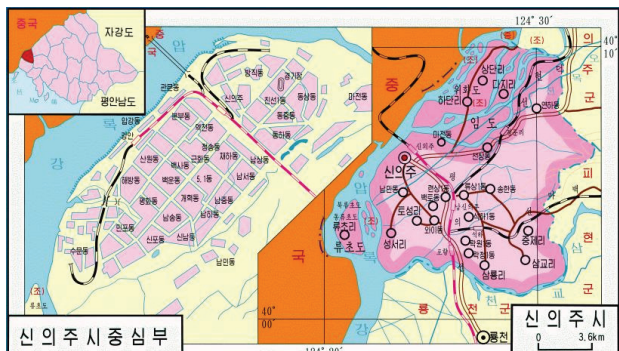
초, 인회석, 석회석 등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신의주는 교통과 통상의 이점이 잘 발달된 도시로 평의선의 종착역이며, 이곳에서 압록강철교를 통해 평양~베이징간 국제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도로교통으로는 평양~신의주간 1급 도로와 신의주~우암간, 신의주~피현간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수상교통으로는 압록강 만조시 약500톤급 기선의 소항이 가능하며 상류의 혜산진까지 작은 배가 왕래하나, 겨울에 1m이상의 결빙과 간조시 수심이 얕아지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무역항으로서의 결점이 많아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평북 염주군의 외항 다사도가 신의주의 관문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의주는 일제강점기 당시 건설된 경의선의 종점으로 중국과 연결되면서 도시성장이 본격화된 계획도시다. 신의주 일대는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신의주 인근의 노동력은 67.6만 명으로 평양남포와 안주지역 다음으로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의주지구에는 역청탄과 갈탄이 풍부하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제철, 기계, 화학공업 및 경공업으로 섬유, 식료, 신발, 일용품, 제지공업 등이 비교적 고루 발달했다. 특히 신의주 펄프공장은 생산제품을 전국으로 공급하는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신의주 특산품으로 이름 높은 법랑칠기와 화장품 공장에서는 전국적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신의주에는 차광수신의주제1사범대학, 신의주제2사범대학, 신의주의학대학을 비롯한 대학들과 전문학교, 중학교 등이 있다.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 저 『新북한의 산업(2005년)』 중 발췌.)



▶제9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북한 군부에 대한 오래된 오해 ----- 2

이주의 주요 기사

北, 대체 에너지 활용 몸부림 ----- 3

美 “대북 중유 제공 중단할 때 아니다” ----- 4

“베네룩스 기업들, 대북 진출 모색” ----- 5

“10.4합의 추진 경제효과 최대 55조원” ----- 6

물류포럼 회장, “남북 경색, 경험 중대 갈림길” ----- 6

RFA “北, 외국 기업끼리 지분·경영권 인수 허용” ----- 7

항장업 ‘급변사태’ 운운...아랑 없는 태도 이해 안돼 ----- 8

“북핵 검증, 너무 과도해 힐 차관보도 반대”-WP ----- 9

North Korea After Kim ----- 10

北朝鮮クーデターの可能性否定 黄元書記 ----- 11

추천논문 / 상생·공영의 남북경협 발전 방향과 과제 -----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제6회 국방 정보화 정책세미나

▶주제 : C4I 체계 진단 및 발전 방향

▶일시 : 2008년 9월 30일(화) 09:30

▶장소 : KIDA관영단, 대강당

●200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토론회

▶주제 :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를 위하여

▶일시 : 2008년 9월 30(화) 14:00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평화재단 제25차 전문가 포럼

▶주제 : 1. 현시기 북한사회개발협력 무엇이 쟁점인가 / 2.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일시 : 2008년 9월 30(화) 14:00~17:00

▶장소 :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이 주의 칼럼

북한 군부에 대한 오래된 오해

이대근(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기면 외부인들은 흔히 군부를 주목한다. 지난 달 26일 북한이 핵 불능화 작업 중단 및 원상 복구를 발표했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런 관측을 뒷받침할 만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덕분에 며칠 만에 무성한 소문과 억측은 잦아들었지만, 군부가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 그들 잘못은 아니다. 북한이 그렇게 유도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상대를 압박하고자 할 경우, 때로는 ‘우리 해당 기관’이라며 은근하게, 때로는 ‘우리 인민군대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군부를 내세웠다.

이렇게 외부의 군부 인식과 그 인식을 압력으로 활용할 줄 아는 북한의 전술이 상호작용한 결과는 ‘북한 군부는 힘센 강경파’라는 이미지의 확대 재생산이다.

그러나 군부가 강경파 역할에 충실하다는 사실과 강경정책을 주도 한다는 주장은 다른 것이다. 만일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강경파라면, 그동안 전쟁이 났어도 열 번은 났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을 했으며, 개성과 금강산의 군사 요충지에 이어 해군기지인 해주 역시 남한에 특구로 넘겨주기로 했다.

올 4월 방북했던 미국의 레온 시걸 박사가 전하는 판문점 대표부 대표 이찬복 상장의 말도 그런 고정관념과 충돌한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군대는 외무성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추측하는데 그렇다면 증거를 대보라.” 시걸 박사는 “북한군부가 외무성 관리들보다 진보적이라는 인상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왜 그런가. 군부는 당의 충실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대는 독립적인 제도가 아니다. 당과 군은 사상·조직·인사로 중첩되어 있다. 그러므로 당·군 대립 관계를 전제로 한 관측은 잘못된 것이다.

군부가 당 통제를 벗어나 권력을 휘두른다면 가장 두려워할 쪽이 누구일까. 남한? 미국? 중국? 아니다. 바로 자기 옆에 있는, 명령 하나로 중무장 상태에서 신속하게 동원되는 거대한 상명하복의 집단이 탄 마음을 먹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장 민감해 할 쪽은 김정일이다. 선군정치를 도입한 것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군부가 탄 마음 먹지 못하게 확실히 묶어 두자는 데 있다.

그런데 김정일 유고 상태에 가까워졌으니 빨리 통일하자거나 미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군부를 제압할 준비를 하자는 것은 순진하고도 무지한 생각이다. 군부에 대한 오해는 북한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대북정책 방향을 오도할 수 있다. 우리에게서 북한 군부를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 글의 원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171820395&code=99033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 내달 첨단 용접기술 발표회 개최

-- 9월 22일 연합뉴스

북한의 과학기술총연맹은 다음달 21~22일 평양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레이저와 플라스마 등 첨단기술을 용접분야에 보급하기 위한 과학기술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9.14)가 전했다.

참가 대상은 과학기술자, 대학교수, 박사원생, 기능공 등이며, “발표회는 첨단과학기술을 용접부문에 널리 받아들이는 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고 이 부문 일꾼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발표회에서는 ‘레이저 용접장치 및 용접기술’, ‘플라스마 용사장치 및 용사재료’, ‘미소플라스마 용접장치 및 기술의 개발 도입’, ‘컴퓨터에 의한 용접봉 탐색’, ‘첨단 기술에 기초한 여러 가지 용접설비들의 현대화’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기초수학, 확률론, 수리통계학 등과 관련한 수 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도 같은 기간 김일성종합대학 수 학역학부에서 열린다고 덧붙였다.

北 방송 “美 금융위기 자본주의 취약성 보여줘”

-- 9월 22일 연합뉴스

“투기와 헐잡, 무질서와 혼란으로 얼룩진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 평양방송은 21일 “최근 미국에서 전례없는 금융 위기가 휩쓸어 아비규환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방송은 “지난 15일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라고 하던 리먼 브러더스가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던 끝에 파산신청을 내기로 결정해 약 160년간 존재해온 이 은행은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됐다”며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이유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과잉투자과 부시 행정부 기간 미국경제의 침체로 꼽았다.

이 방송은 “미국 금융위기의 후과는 다른 나라와 지역 들에까지 퍼지고 있다”며 “특히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일 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46개의 금융업체들이 리먼 브러더스은행과 거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은행이 뜻밖의 파산으로 입게 될 손실액이 4천400 억엔에 달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대북 자재 지원 다음달 중순쯤 결정”

-- 9월 22일 노컷뉴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2일 북한 핵시설 불능화 중단에 따른 대북 상응 조치 이행에 대해 다음달까지 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차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아직 대북 에너지 자재 지원 문제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자재 생산이 다음달 중순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 불능화 상응 조치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설비 자재 가운데 미제공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톤 가운데 1천5백톤은 생산을 마쳤고 나머지 1천5백톤은 다음달 중순까지 생산을 마칠 예정이다.

홍 차관은 특히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중단에 그치지 않고 원상 복구한다면 (설비 자재 지원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北, 대체 에너지 활용 몸부림

-- 9월 22일 연합뉴스

고질적인 에너지난에 국제적인 고유가까지 겹친 북한이 “한 W(와트)의 전기,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끼기 위해 석탄은 물론 축력과 수력 등 모든 가용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느라 몸부림치는 모습이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주요 석유 공급원이었던 옛 소련이 1989년 해체된 이후 80%가량의 농기계 가동을 중단해야 했던 북한에서 에너지난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특히 최근 국제적인 고유가 사태까지 덮침으로써 북한으로선 허리를 더 졸라 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최근 비료 생산공정을 무연탄 가스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북한의 대내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22일 전했다.

방송은 가스화 사업에 대해 “연유(연료용 기름)를 전혀 쓰지 않고 우리나라(북한)에 흔한 무연탄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주체적 비료생산 방법”이라고 설명, 이번 사업이 연유 사용 대체 목적임을 밝혔다.

황해남도 해주강철공장에서는 종전에 비해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쇠물 생산능력을 5배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설비들을 개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지난 16일 전했다.

北 평양서 고려왕궁 ‘만월대’ 유물전

-- 9월 22일 연합뉴스

북한 평양에 있는 중앙역사박물관에서 개성의 고려왕궁터인 ‘만월대’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개막돼 다음달 말까지 계속될 전시회에는 만월대의 서부건축군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고려자기와 기와, 벽돌 등 80여점의 유물과 중앙역사

발물관이 자체 수집한 10점 등 총 9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만월대 발굴사업은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합의로 작년 5~11월 공동 추진된 것이나, 조선신보는 “역사박물관의 학술집단”이 발굴했다고만 말하고 남북이 함께 발굴사업을 벌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전시중인 유물에는 대접, 바리, 접시, 잔대, 도기 매병, 원통형 청자 등의 도자기류와 청자기와, 일반기와, 막새기와, 명문기와를 비롯한 기와류, 바닥전과 장신전 및 벽전 등의 벽돌류가 있다.

北, 제4회 평양 가을철 국제 상품전람회 개막

-- 9월 22일 연합뉴스

북한은 22일 평양의 3대 혁명전시관에서 제4회 평양 가을철국제상품 전시람회를 개막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의 70개 기업을 비롯해 15개국 150여개 기업이 참가했다. 중국 업체는 대부분이 랴오닝(遼寧)성 기업들이다.

지난 2005년에 시작해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전시회에는 전자제품, 기계류, 의약품에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선을 보였다.

북한 리명산 무역성 부상은 “우리는 평등과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이익의 원칙 아래 모든 종류의 경험과 교류의 확대·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서성구역 연못동에 있는 3대혁명전시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첫날인 10월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으로 북한의 최신 산업기술을 선보이는 대표적 국제전시장이다.

北, IAEA에 핵시설 봉인 제거 요청

-- 9월 23일 연합뉴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의 감시 카메라와 봉인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22일 밝혔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IAEA 이사회에서 개회 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북한이 IAEA 사찰요원들에게 재처리시설에서 핵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봉인과 감시 장비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IAEA와 밀접한 고위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봉인이 이미 제거됐다고 보도했으며 dpa통신도 서방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봉인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또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서 북한 측이 제거했던 일부 장비들도 원상복구됐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 상태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어 “북한이 가능한 한 조속히 핵 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IAEA의 포괄적인 안전 조치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美 “대북 중유 제공 중단할 때 아니다”

-- 9월 23일자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2일 북한이 불능화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는 데 대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신고 검증체제를 수용하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영변핵시설 재가동 움직임에 맞서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할 지 여부와 관련,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변핵시설 재가동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봉인 및 감시카메라 제거를 요청한 데 대해 “이번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향후 며칠간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실제 영변핵시설 가동에 들어갔는지와 관련,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준비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평가하면서 “미국은 외교적 논의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길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검증체제에 합의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핵신고내역에 대한 검증체제에 합의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李대통령 “모든 남북합의의 정신 존중”

-- 9월 23일 동아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그간 모든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주시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북 지역회의에서 홍종길 부의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의 전면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절대시하는 6.15, 10.4 선언의 이행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두 선언의 현실적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경험이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 등에까지 균형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북핵긴장속 ‘대북 유화행보’

-- 9월 23일 연합뉴스

북한의 핵시설 원상복구 착수로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유화적이고 신중한 대북 발언 및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정부의 유화 기류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하중 통일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 지역 회의 개최사(대독)에서 ‘6.15, 10.4 선언을 포함한 남북간 기존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두 선언의 이행에 대해 이전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김 장관은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마당에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시종 견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8월 민주노총 등 사회문화 단체의 대규모 방북을 반려했던 기조에서 변화, 20일 방북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단체 및 사회문화 단체들의 중·대규모 방북을 가급적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구체적인 대북 대화 제의를 염두에 둔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정부 안팎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그보다는 불투명한 북핵 전망 속에 남북관계마저 악화되는 것을 피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전기가 올 때를 대비, 상황을 관리하려는 입장이 최근 대북 발언 및 정책 결정에 투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베네룩스 기업들, 대북 진출 모색”

-- 9월 23일자 연합뉴스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 상공회의소’가 중국기업과 함께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은 유럽과 중국의 크고 작은 600여개 기업이 가입한

단체인 베네룩스 3국 상공회의소가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투자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베네룩스 국가들의 북한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을 찾기 위해 설명회를 갖게 됐다”며 이번 설명회는 “이번주 열린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뒤를 이어 대북 투자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북한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대북 투자 성공 가능성이 논의되며 북한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설명 및 개성공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사례 소개 등이 예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투자의 득과 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급하게 결정했다가 쉽게 빠져나오는 대북 투자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의지”도 이번 설명회 개최 목적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 잇단 방북..27일 ‘겨레하나’ 평양행

-- 9월 23일 연합뉴스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중단됐던 민간단체들의 대규모 방북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어 북측의 방북 허용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녘 산림복구 사업을 해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는 2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 100여명 규모의 참관단이 대한항공 직항기 편으로 방북, 평양 삼석구역 통일양묘장 착공 행사를 마치고 묘향산과 백두산을 관광한 뒤 30일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방북단 136명이 지난 20일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22일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96명이 북한 고려항공 직항편으로 방북한데 이은 대규모 방북이다.

삼석구역 양묘장은 약 10ha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양묘시설, 관리동 등을 갖추고 잣나무와 가문비나무 등 묘목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10억원으로 불교 조계종과 민주교수협의회 등 단체와 노점상 등 서민들의 모금으로 충당되며 첫째 사업을 위해 이미 양묘장 기자재 등은 대부분 북측에 전달된 상태다.

회견 참석자들은 또 중국이 아닌 북측을 통해 백두산을 둘러보고 묘향산 관광 코스일정까지 합의해낸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北, 경제과제 달성 “총력투쟁” 촉구

-- 9월 23일자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3일 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랑스런 성과”가 마련됐다면서 연초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제

시된 경제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신문은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전후 빈터 위에서 사회주의 강국으로 비약하던 천리마의 정신, 고난의 행군의 엄숙한 시련을 맞받아 헤치며 낙원의 길을 열던 대담한 공격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신문은 올해의 경제·문화 성과로 대게도 간석지 1호 방조제 공사 완공,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생산공정 현대화,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사리원방직공장의 연간 생산계획 조기달성, 집단체조 ‘변영하라 조국이어’ 창작 등을 꼽았다.

北 신문 “우리도 쿠바처럼”

-- 9월 23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3일 태풍 ‘구스타프’와 ‘아이크’로 큰 피해를 입은 쿠바가 미국의 조건부 원조를 거절하고 곳곳하게 대처해나가고 있다며 재난 ‘자력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6월 말부터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대미 의존 심리가 자라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자기의 힘으로 재난을 가시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의 신세를 지고 얹매어 눈치를 보며 사느니 좀 품이 들어도 제힘으로 일떠서는(일어서는) 것이 몇몇하고 옳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태풍이 지나간 뒤 러시아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등이 쿠바에 인도주의 지원을 했으나 미국은 피해규모 평가단의 파견을 조건으로 원조를 제의해 “쿠바에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쿠바정부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의 조건부 원조 제의에 대해 쿠바는 “미국이 실제로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는 쿠바 인민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면”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자유롭게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면 대응(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쿠바가 미국의 지원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10.4합의 추진 경제효과 최대 55조원”

-- 9월 24일자 노컷뉴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업이 성공적으

로 추진되면 남한은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김영운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추정했다.

그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열리는 홍사단 통일포럼 발제문에서 정상선언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은 25조7천억~38조9천억원(269.3억~407.5억달러)의 생산 유발효과와 10조8천억~16조4천억원(113.3억~172억달러)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지대 개발에 46억~92억달러, 북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22.4억~23.3억달러 등 경협사업 이행을 위해 10조7천억~15조2천억원(111.8억~158.7억달러)의 투자비용이 들지만 이를 통해 투입 대비 1.7~3.6배의 생산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대북사업 추진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 유발효과는 26.9억달러에서 40.8억달러”라며 “초창기에는 연간 12억~13억달러 수준에 불과하겠지만 규모가 점차 확대돼 사업 후반기에는 연간 최대 3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연평균 27억3천만달러를 북한에 투자할 때 남한 경제에는 연평균 0.2~0.3%의 후생부문 성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남한에서 이같은 후생부문 증가는 액수로 122억3천만달러에서 183억달러에 이르는 규모”라고 말했다.

또 “후생부문의 증가는 연간 7억3천200만달러에서 10억9천800만달러의 임금소득을 낳고 이는 3만~3만6천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같은 효과”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하고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 경협사업 추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인용, 남북 교역액이 2000년 4억3천만달러에서 2006년 13억3천만달러로 증가하면서 북한의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 비율인 대남 교역의존도 역시 17.9%에서 31.0%로 크게 상승했다면서 “남북간 경색은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를 저하시키고 북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물류포럼 회장, “남북 경색, 경협 중대 갈림길”

-- 9월 24일 노컷뉴스

남북관계 경색과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기업이 이미 나타나는 등 남북경협이 중대한 갈림길에 봉착해 있다고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말했다.

남북물류포럼 김영운 회장은 2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홍사단 통일포럼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그동안 양적으로 발전해 온 남북교역은 남북 경색관계로 순수 교역액은 올 7월까지 3천9백5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9백60

만 달러보다 33.6%가 줄어드는 정세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도 남북경협 추진협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남극 경색 관계로 난관에 부딪어 북측으로부터 인력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출기업은 물론 1단계 분양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경우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개성공단 2 단계공사 등 6개 분야에서 남한이 얻는 경제적 생산 유발 효과는 25조 7천억~38조 9천억 규모에 이르며 10조 8천억~16조 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최대 55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둬 투입 대비 1.7배~3.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경협의 앞날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교류협력의 장기간 침체는 기업의 장단기 투자수익 효과를 차단하고, 통일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 전체 차원에서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북한의 개방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북 경협을 포함한 대북 정책이 현실적 차원에서 훨씬 더 세련된 전략적 구상을 해야 하며, 남북 경협은 사실상 통일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정보기관, ‘北 급속 붕괴 없을 것’ 예상”

-- 9월 24일자 연합뉴스

미국 정보 당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통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급속히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따른 북한 체제 및 권력구도의 변화를 예상한 분석 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수십년간 주민들에게 철저한 사상 교육을 시킨 점, ‘특권계층’이라 볼 수 있는 노동당과 군부 엘리트들이 리더십의 구조적인 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김 위원장의 건강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체제의 급격한 붕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단순히 신체적 장애 정도일 경우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사실상의 부인으로 알려진 김 옥 국방위원회 과장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간접통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에게 대리인 역할을 맡길 경우 김 위원장은 외교 정책과 안보 문제 등에만 관여하게 될 것으로 미국 정보기관은 내다봤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건강이 통치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비밀로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체제의 건재함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미 정보기관은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RFA “北, 외국 기업끼리 지분·경영권 인수 허용”

-- 9월 25일 노컷뉴스

북한이 북한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끼리 지분 인수와 경영 승계를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표적인 국영 기업인 상원 시멘트 공장은 지난해 7월 이집트 건축회사 오라스콕이 1억 1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구조 조정을 이유로 프랑스 회사에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시멘트 회사를 Lafarge 사에 약 110억 달러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건축회사인 Lafarge SA의 클레어 공보담당관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지난해 12월 이집트 건축회사인 오라스콕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시멘트 공장을 사들이면서 북한 상원 시멘트 공장의 지분 50%도 그대로 넘겨 받았다”고 말했다. 클레어 공보담당관은 “북한이 앞으로 여러 기반시설을 늘릴 것으로 보여 북한에서는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시멘트에 대한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상원 시멘트 공장은 잠재력이 높다”고 말했다.

Lafarge 사는 “북한의 시멘트 공장 지분은 물론 북한의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석회석 돌산과 석탄 탄광의 채굴권도 함께 넘겨받아 북한의 광물 생산과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4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상원 시멘트 공장을 인수한 부르노 라퐁 Lafarge 사 사장과 나세르 사위리스 오라스콕 사장을 초청해 만수대 의사당에서 만찬을 함께해 북한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기업들 끼리 지분 인수를 인정하고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北라진-러 하산 철도현대화 공사 내달 3일 시작

-- 9월 25일 연합뉴스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의 하산역을 잇는 철도구간의 현대화 공사가 내달 3일 시작된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조선(북)의 라진항과 러시아 국경지역인 연해변강의 하산역 사이의 철도구간 현대화가 10월3일에 시작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쌍방은 하산-라진 철도구간 현대화와 라진항 부두건설, 하부구조(인프라) 운영을 내포

하고 있는 하산-라진계획을 공동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합영기업을 창설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이 계획실행의 첫 단계에서 8만대까지의 짐함(컨테이너), 즉 한국과 유럽 사이의 짐함수송의 10~15%를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수송할 수 있다”며 “라진-하산 철도구간 현대화와 부두건설계획에 대한 투자액은 1억4천만유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북·러 양측은 올해 4월 라진-하산 54km 철도구간 현대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한 국제화물 수송을 담당할 합영회사 설립에 합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라진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합작회사도 설립했으며 ‘라진-두만강 철도임대 계약서’도 체결했다

북한에서 생산한 건자재 첫 KS인증

-- 9월 25일 헤럴드경제

현대아산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하는 건자재에 대해 북측 건설공사 최초로 KS 인증을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북측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KS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증심사를 주관한 한국표준협회(KSA)는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과 함께 지난 7월 개성 현지에서 공장심사를 실시했고, 8~9월에 남측에서 제품심사를 거쳐 24일 최종 인증했다. 이번에 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개성공업지구 내 현대아산 건자재공장에서 생산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KS F 4009, 레미콘),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KS F 2349, 아스콘)이다.

2004년부터 가동된 현대아산 개성 건자재공장은 레미콘, 아스콘을 각각 연간 65만m³, 36만톤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KS인증을 통해 고품질 건자재를 공업지구 내 건설현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번 KS인증으로 개성공단 건설현장에 공급되고 있는 건자재의 품질 우수성이 증명된 것”이라며 “중요한 건축자재의 KS인증으로 향후 북측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도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연극영화대학, 특수촬영학과 신설

-- 9월 25일 연합뉴스

북한 연극·영화인 산실인 평양연극영화대학이 최근 화상기교학과, 영화음향학과, 영상가공학과 등을 신설해 특수촬영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25일 전했다.

화상기교학과에서는 공중 촬영, 모형 합성 촬영, 사진 회화 합성 촬영 등 특수 효과와 합성 촬영기법을 교육하고, 영화음향학과에서는 영화녹음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기를 가르친다.

영상가공학과에서는 현대적 영상기록 매체, 디지털 비디오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영상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 학교 김택진 학장은 신설 학과는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기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을 결합시켜 복합형 인재를 키우는 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1953년 11월 평양종합예술학교로 문을 연 이 학교는 1956년 8월 ‘국립연극학교’로, 1959년 9월 ‘평양연극영화대학’으로, 1972~88년에는 ‘평양영화대학’으로 발전해왔으며 연극·영화부문뿐 아니라 TV 및 출판보도 분야의 인력도 배출하고 있다.

황장엽 ‘급변사태’ 운운...아랑없는 태도 이해 안돼

-- 9월 25일 뉴시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2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자꾸 ‘급변사태’라고 떠드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랑이 없느냐”고 최근 북한문제에 대한 국내 여론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적과 싸우다가도 상대방 대장이 앓거나 죽으면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예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은 어차피 죽기 마련인데 그것을 두고 왜 자꾸 급변사태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주 점잖지 못하고 신중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은 현재 김정일 정권 아래 있지만 그들 모두는 우리의 국민”이라며 “우리가 세끼 먹던 것을 두끼만 먹더라도 북한 동포를 돕겠다는 태도를 취해야지, 거기에 무슨 대가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지원을 두고) 인도주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거지들에게 주는 배려라도 된다는 말이나”며 “우리 정부는 남한만의 정부가 아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EU기업 참가 증가”

-- 9월 25일 노컷뉴스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유럽(EU) 지역 기업들의 참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리는 제4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는 국내외 110여 군데 회사가 참가한 가운데 유럽지역에서는 23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유럽지역 기업들은 지난 가을철 전람회에 8개의 기업이 처음 참가한 데 이어 올 봄철상품전람회에는 17개 기업, 이번에는 23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북한 유럽기업협회 회장인 대동신용은행 나이젤 카위 총재는 “전람회에 참가하는 유럽기업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유럽기업협회의 착실한 활동이 결실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관계자들은 “조선을 둘러싼 정세가 변해도 무역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유럽기업인들의 의향에 변함은 없다”면서 “50개의 유럽기업을 평양에 유치하는 게 당면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경제·남북문제 초당적 협력”

-- 9월 26일 서울신문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경제 살리기와 남북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1시간55분 동안 오찬을 겸해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지난 5월 회동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정 대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성화하고 보증배수를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풀도록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과 키코(KIKO)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구제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함을 표시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대북 네트워크와 대북정책 노하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인도적 대북식량 및 비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뒤 개성공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에 대해 ‘국정동반자’라는 관계설정을 강조했다.

북한-싱가포르간 직항기 첫 취항

-- 9월 26일 노컷뉴스

북한과 싱가포르 사이에 직항 전세기가 처음으로 운항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싱가포르의 북한 전문 관광여행사인 ‘유니버설 관광’ 구 부 리앗 이사는 “고려항공이 지난 17일 싱가포르에 처음 도착해 다음날인 18일 오전에 다시 관광객들을 태우고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리앗 이사는 “평양, 원산, 개성, 관문점 등을 둘러보는 7일에서 10일 일정의 이번 관광 상품을 통해 모두 370명의 싱가포르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다”면서 “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취항한 직항기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두 8차례 운항되며, 이번 직항기 운행은 북한과 싱가포르가 지난 7월 북한의 정권수립 60돌을 기념해 9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전세 직항기를 운항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과 직항로를 개설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태국 등 3개 나라지만, 중국노선만 매주 운항하고 있다.

北, 대동강서 강태공 선발경기

-- 9월 26일 연합뉴스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강태공들의 낚시경기가 25일 평양 대동강에서 열렸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했다.

각 도와 성(省), 중앙기관에서 선발된 60명의 ‘낚시질 애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경기에서는 “제정된 시간 내에 잡은 물고기들의 총연장 길이”에 따라 순위를 매겼으며,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사 부원인 연동철씨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또 “묘한 낚시질 수법으로 고기잡이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한 황해남도 삼천군에 사는 차정구씨가 기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낚시도구 창안품 전시회도 열려 황해남도, 함경북도, 평양시에서 내놓은 낚시도구와 미끼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북핵 검증, 너무 과도해 힐 차관보도 반대”-WP

-- 9월 26일 뉴시스

미국이 북핵 검증 체계를 북한에 요구하면서 제시한 검증 방법이 너무 지나쳐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검증 체계를 요구하면서 과도한 수준의 검증 방안을 담은 제안을 건네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국무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음에도 결국 북한에 제시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현재 북한의 북핵 검증 거부해 미국 정부의 과도한 사찰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26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국무부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 군축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된 검증 방법에서 북한에 대해 ▲ 과

거 핵 관련 목적을 가졌었던 모든 지역의 물질에 대해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고(full access to all materials) ▲ 군사 시설을 포함, 핵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지역, 어떤 시설, 어떤 장소든 완전한 접근(full access to any site, facility or location)을 요구하고 있다.

4페이지에 달한 이 검증체계 요구 사항은 또 사찰관들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as long as necessary)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도 할 수 있어야 하도록 허용돼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반복적으로 방문할 수 있고 샘플을 채취하거나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안은 심지어 북핵 협상을 맡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다른 협상 대표들도 반대했지만 결국 ‘고위선’에서 이들의 의견이 묵살돼 실행됐던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 때문에 검증안을 놓고 부시 행정부 내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였었다고 전해졌다.

힐 차관보는 협상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요구안의 수위를 낮춰 북한이 이에 대한 인정을 하도록 하자고 설득하려 했으나 결국 행정부 내 강경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북핵 검증 방법에 대해 모호한 합의를 내릴 당시 검증 전문가들에게 긴밀하게 논의되지도 않았었으며, 이와 관련해 한 관리는 “북한은 언제든지 검증에 대해 거절할 수 있었으나 최근까지 그러지 않았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 핵사찰관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어떤 주권국가도 그같은 요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며, 그것은 원하는대로 그들의 군사 지역에 대해 염탐할 수 있는 면허를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 방북 ‘북핵 극적타협’ 분수령 넘을까

-- 9월 29일 한겨레신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북한 방문 협의는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6자 회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힐 차관보가 평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담판을 통해 극적 절충에 성공한다면, 핵시설 불능화 등 9·19 공동성명 2단계(10·3 합의) 마무리와 3단계(핵포기) 협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반면에 북·미 담판이 결렬된다면, 북한의 영변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재가동 및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6자 회담 당사국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중단 등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힐 차관보가 북쪽이 극력 거부하고 있는 기존 핵검증 방안보다 기준과 범위를 다소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처리시설 재가동을 공언한 북쪽이 힐 차관보의 방북 협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쪽도 핵 재가동이

불러올 대북 지원 중단 및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강화 등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미가 지금껏 힘겨루기를 해 온 쟁점은 핵검증의정서 마련 및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 발효 시점의 상관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핵검증의정서 마련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북·미가 이에 합의한다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는 바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힐 차관보가,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앞으로 협의하더라도 검증원칙을 담은 의정서에 ‘미신고 시설 방문 및 샘플링’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를 점치긴 어렵다. 북쪽이 힐 차관보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의 다음 행정부와 새로운 게임을 염두에 둔 ‘장기전 전략’에 따라 실제로 핵시설 재가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North Korea After Kim

김정일 이후의 북한

-- 9월 25일 Washington Post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9/25/AR2008092501998.html>

관련자료 : : http://www.cfr.org/content/publications/attachments/Nuclear_Deterrence_CSR39.pdf

The absenc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Chosun Ilbo) from the country's sixtieth anniversary celebrations in September 2008 sparked questions about his health and intense speculation about the future of the country without him. North Korea, a nuclear-armed country under communist rule, is one of the most closed-off societies in the world. A new CFR Council Special Report (PDF) says there is a genuin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might intentionally transfer nuclear weapons or materials to a terrorist group, and thus merits Cold War-style methods of deterrence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some experts believe the country might see some reform in the period after Kim, others see little hope for change, especially in the so far unsuccessful effort to rid North Korea of its nuclear weapons.

.....

북 정권 창건일 행사에 김정일이 부재함은 그의 건강 이상설과 김정일 이후의 북한의 미래에 대한 추측을 불러 일으킴. Council of Foreign Relations(미국 대외협회)의 최신 리포트는 북한이 핵 확산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냉전적인 저지 방안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논함. 동시에 김정일 이후 북한이 일정한 개혁을 도모할 것임을 믿는 전문가들도 있음. 다른 일부는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북핵 해결의 부분적인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음.

N. Korea bars inspectors from nuclear
북한이 핵시설에서 감찰관들을 몰아냈다

-- 9월25일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출처: <http://www.ihrt.com/articles/2008/09/25/asia/25korea.php?page=1>

North Korea's move to resume the reprocessing of plutonium, perhaps as soon as next week, left the country on the verge of restart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whose shutdown had been portrayed by the White House as a significant diplomatic achievement.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said Wednesday that the United States still hoped to preserve a hard-won agreement that called for the North to dismantle its nuclear reactor. But North Korea has refused to resume talks, and no new ones are planne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Vienna announced Wednesday that North Korea had barred international inspectors from a reprocessing plant at its nuclear reactor complex in Yongbyon. The agency said that North Korea, which tested its first nuclear device in 2006 and is believed to have enough plutonium for at least six nuclear bombs, intended to resum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grade fuel there within a week.

While reversible in theory, any resumption of nuclear work would violate the terms of the agreement, which was announced with fanfare in June and solidified, it appeared, by North Korea's public demolition of a cooling tower at youngbyon.

.....

북한이 빠르면 다음주 초 플루토늄 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백악관에 의해 성과로 평가되는 북핵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될 기로에 서있음. IAEA는 지난 수요일 북한이 감찰관들을 영변 원자로 핵 재처리시설로부터 축출하였음을 밝힘.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수달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차기 미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북한과 미국은 미국 매과의 요구에 의한 검증 문제를 둘러싼 현 문제를 원래의 합의에 기반하여, 대화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임.

北朝鮮クーデターの可能性否定 黄元書記

북한 쿠데타의 가능성 부정 황장엽 전서기

-- 9월 25일 산케이신문

北朝鮮から韓国に亡命した黄長燾(=火へんに華)・元書記は25日、金正日総書記の健康悪化説に関連してクーデ

ターの可能性を提起するのは、「北朝鮮を本当に知らないからだ」と否定した。韓国の聯合ニュースなどが伝えた。

韓国の野党、自由先進党が開催した政策懇談会に出席した黄元書記は、核兵器について「金日成生存当時すでに地下核実験の準備をしていたし、濃縮ウランを利用した核兵器が相当数作られた」と指摘。さらに「寧辺の核施設の再稼働や冷却塔爆破は北朝鮮が自らの身代金を高めるためのショーに過ぎない」とした。

また、韓国がこれまで進めてきた対北融和政策「太陽政策」に対して「北朝鮮をあまり知らない人々が作った政策」と批判した。

북한에서 망명한 황장엽 전서기는 25일, 김 총서기의 건강악화설과 관련해 쿠데타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며 부정했다.

그는 핵병기에 대해, “김일성 생존시 이미 지하핵실험 준비를 했으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병기가 상당수 만들어 졌다”고 지적. 더우기 “영변의 핵시설 재가동이나 냉각탑 폭파는 북한이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한국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북 융화정책 ‘햇빛정책’에 대해 “북한을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北朝鮮>トラック通行禁止 補修費なく苦肉の道路保全

트럭 통행금지 보수비 없어 고육지책의 도로 보전

-- 9월 26일 마이니치신문

「これ以上、トラックが通ると道路が壊れる」ー。中朝貿易の大動脈、北朝鮮平安北道(ピョンアンブクト)新義州(シンウィジュ)と平壤を結ぶ幹線道路のうち約半分の区間で8月下旬から、北朝鮮当局によって道路保全を名目にトラックの通行が禁止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同国経済関係者が明らかにした。道路が著しく劣化しているのに補修費がなく、地元幹部が対応策をひねり出した形だが、中朝貿易関係者からは「運送効率を遅らせる『後ろ向きの経済策』だ」と非難の声が強まっている。

“이 이상 트럭이 통행하면 도로가 붕괴한다” 중조무역의 대동맥, 북한 평안남도 신의주와 평양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약 반 정도의 구간에서 8월 하순부터, 북한당국의 도로보전을 명목으로 트럭 통행이 금지되었다. 도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보수비가 없어, 해당 간부가 대응책을 짜내고 있지만, 중조 무역관계자들은 “운송효율을 저체시키는 ‘뒤로 가는 경제책’이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천 논문

상생·공영의 남북경협 발전 방향과 과제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현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의 특징은 첫째, 북한의 선 대화 수용, 둘째, 실용과 생산성 그리고 원칙의 강조, 셋째, 기존 합의의 선별적 이행, 넷째,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남북경협 등 관계 진전, 다섯째, 경협사업은 민간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 여섯째, 기존 사업 내실화 VS 신규 사업 신중한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특징만으로도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 실효성 등은 상대방인 북한이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딜레마에 직면했다. 북한의 태도와 입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당분간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북한이 더 관망하면서 각종 합의사항 이행을 미룰 경우 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합의된 3통 문제, 기숙사 건설 등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생산 활동에 적지 않은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남북경협은 전략적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존 돌파구로서 의미를 갖는 순수한 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상생과 공영, 실용과 생산성 등의 기준은 남북경협 추진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남

북경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원칙으로 간주하는 역발상도 필요하다. 북한과 같은 취약 국가 또는 미성숙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독자적인 힘으로 수익성과 생산성을 창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 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경협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정책 결정이 지체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더욱 불투명해졌고,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의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남북경협을 확대 발전시켜 북한의 남한경제 의존도를 높여 주변 열강의 개입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또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와 실질적 신뢰 구축이 남북경협 발전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현실에서 개성공단 사업 지속적인 확대 발전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할 구체적인 조치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http://hri.c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평양구두공장에서 생산되는 ‘날개’상표의 구두가 구매자들에게 호평 (조선신보 9월19일자)

○ 평양구두공장에서 생산되는 ‘날개’ 상표 구두가 참신한 디자인으로 구매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구두의 형태는 남성구두의 경우 앞끝이 뾰족한 형태이고, 여성구두의 경우 앞끝이 뾰족하고 굽이 5cm 이상인 형태이다. 강창욱 기술준비실 실장에 따르면, 현재 기술준비실은 가을용 및 겨울용 신발 착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준비실 성원들은 시민들의 기호에 맞는 신발 형태를 찾기 위해 상점에 나가 수요정형을 알아보고 시민들의 반응을 청취하고 있다. 평양구두공장에서 생산되는 다종다양한 구두제품들은 평양 제1백화점과 각 지역 공업품 상점에서 대량 판매되고 있다.

<분석>

○ 현재 평양구두공장은 내수용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유통되는 구두의 약 30%가 평양구두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평양구두공장의 주력제품은 여름용 남녀 샌들과 겨울용 여성구두다.

북한이 2007년부터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평양구두공장에서 확대 재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년대비 2007년에는 2배, 2008년에는 1.5배로 증가했다.

북한은 ‘인민생활 제일주의’에 따라 인민 소비품 공급 확대 및 품질개 선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통일부)